

# 데스크시각

조경완



2005년 6월의 일이다. 이미 세력이 쪼그라든 새천년민주당이 여의도에 당사를 얻어 간판을 새로 달았다. 새 당명은 민주당이었다. 당시 아무도 '새천년' 석자가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만 필자는 그때 민주당에 남은 사람들의 기대 중 전 대통령(DJ)에 대한 인연깊기라고 생각했다.

새천년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DJ당이였다. 그런 정당에서 대다수 국회의원이 이 우루루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꾸렸는데도 DJ가 이를 용인하지 않은 사람들은 서운했을 것이다. 석자를 뺐던 것은 DJ의 우산 없이 정통야당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보였다.

## 민주주의 범통 이은 정당

한국 정당사에서 제 정당들은 오로지 지도자의 행보에 따라 이합집산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정당들에 어떤 범통이 있었다면 그건 민주당 뿐이다.

민주당의 뿌리는 1949년 신익희 선생의 민주국민당(민국당)이다. 친일자본가

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에 반대해 최초의 야당이였다. 이 민국당에 1955년 조병옥·장면 박사가 가담하면서 확대된 게 '민주당'이다. 이승만정권에 맞서 '못살겠

다 가라보자'의 구호 아래 신익희 선생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한강 백사장 30만 균중을 불러모은 강령 야당이였다. 신익희의 호남선 열차 속 급서(急逝)로 집권의 꿈은 좌절되지만 민주당은 4·19 이후 마침내 짧은 집권에 성공한다.

5·16 이후 박순천이 이끌던 민주당은 1967년 유진오와 유진산이 가세하면서 신민당으로 정통성을 이어간다. 역사적인 1971년 대선에서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대결한 DJ는 신민당 후보였잖은가.

유신 압축과 5공독재를 지나 1987년 DJ와 김영삼 전 대통령(YS)은 통일민주당을 창당하며 신민당의 범통을 이어지만 1990년 YS가 3당합당에 도장찍는 바람에

정통성은 DJ의 평민당이 물려받았고 평민당은 1991년 민주당으로,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로, 1997년 자민련과의 연정으로 집권에 성공한 뒤인 2000년 새천년 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으며 다시 기묘한 야당 신세가 된 2005년 당명을 민주당으로 되돌린 것이다. 정확히 반세기가 걸린 여정이였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지난 5년은 집권당이면서도 야당이 돼버린, 모한 소수정당으로 살아야하는 처지가 참 어처구니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에 불

# 민주당을 어쩔 것인가

을 수도 없고, 여당의 중요정책에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도 없는 고약한 상황에 머리아팠을 것이다.

그래도 민주당은 버텼다. 세가지 힘이 있었다. 호남은 끝까지 자신들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게 첫째 힘이고, 열린우리당이 민심을 잃어간다는 게 둘째 힘이고, 정통민주당의 세력의 범통은 자신들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게 셋째 힘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달라졌다. 몇가지 선거에서 호남사람들은 애정을 거두고 있다. 가장 큰 밑천이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하던 열린우리당은 사라졌고 정권은 한나라당에 넘어갔다. 열린우리당이 실정을 하면 민주당이 호남의 사랑을 독차지하리

란 셈법도 틀린 것이다. 믿는 구석이라면 정통성인데 이마저도 살려내지 못하고있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호남인은 민주당 대신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대통합신당을 사랑하는가. 마지못한 선택일 뿐이다. '대선용 가진물'로 표현되는 신당은 대선 패배 후 너털너털해진 채로 남아있을 뿐이다.

## 이대로 소멸하려는가

순화규씨가 당 대표로 뽑히자 이해찬씨가 탈당하는 장면에서는 이른바 친노(親露)들이 반달임을 드러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탈당해 봐야 오갈곳 없는 그들은 비새는 지붕 밑에서라도 버티기로 한 모양이다. 최소한의 이념적 연대감도 남아있지 않은 그들의 총선용 동거가 안쓰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정통 민주당의 정당으로 부활하려면 좋은 신당과 합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당을 깨고 나간 잘못만을 묻고 늘어지지 앞서, 구 동교동계의 부패에 대해서 반성해야 한다. 신당의 입장에서 민주당에 겸손해져야 한다. 임기 두달 남은 의석수를 갖고 민주당을 꼬마 취급 해선 안된다.

민주당은 호남인에게 사랑과 미움이 교차하는 당이다. 이대로 소멸되기에 너무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다. 시간이 없다. 우물쭈물하다간 민주당은 '당명 대여업'이 나 해야 할 지 모른다.

<편집부국장>kycho@kwangju.co.kr

# 시설

## 광주비엔날레 전면 쇄신으로 재도약 해야

지난해 '신정아 사건'으로 위상이 크게 실추된 광주비엔날레에 대해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체적 위기에 빠진 광주비엔날레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5일 열린 '광주비엔날레 개혁방안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재창립 정신으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감독 선임방식과 재단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광주비엔날레는 지난 1995년 창설된 이래 6번의 전시회를 치르면서 국내외 미술·문화의 교류와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연구능력 부재와 운영의 미숙성, 내부 불협화음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가짜박사 선정아성을 '2008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선임하는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러 최대 위기에 빠졌다.

광주비엔날레의 위기는 총감독 선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 등 재단의 검증 시스템 부재와 비전문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따라서 내부 검증시스템과 운영체계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 광주비엔날레가 '안방잔치'에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정보시스템 확충과 지역과 전국, 세계를 잇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지역 일부 인사와 비전문인에 의해 주도돼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기능 강화 등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문화·예술 전방을 아우를 수 있는 전시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타 비엔날레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혁방안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재단운영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쇄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늦출 이유 없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조직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지난 14일 발의됐다. 특별법은 국회 관련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세계박람회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박람회법은 이제 4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여수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박람회장 건설을 비롯해서 리소트, 호텔, 식당, 공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철저히 준비해야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세계박람회 특별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은 박람회 개최에 인력·예산·행정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이 지연되면 박람회의 핵심 조직인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박람회 종합계획 등 사업

전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인 세계박람회의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여수엑스포의 생산유발효과가 10조원,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창출도 9만여명에 달하고 관광객은 2002년 월드컵의 두 배 정도인 800여만명이 몰릴 전망이다.

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늦출 이유는 없다. 정치권은 한결같이 세계 박람회에 협조를 약속했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적극 지원을 다짐했다. 박람회는 여수에서 개최되지만 엄청난 국가계획이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엑스포 개최를 통해 경제강국의 기반을 다졌다.

박람회는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2월 국회는 사실상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다. 4월 총선이 치러지는 만큼 특별법안은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총선 조직인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박람회 종합계획 등 사업

# 기고



손홍식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다진다. 아울러 간절히 소망을 가진다. 수많은 소망들 중에서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부나 명예를 잃으면 일부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다 잃는다'라는 말이 대변이라도 하듯이 건강에 큰 비중을 둔다. 건강을 다지기 위해 수영, 등산, 걷기 등 나름대로 여건과 체질에 맞춰 운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환은 찾아온다. 생명나눔운동은 그래서 필요하다.

최근 최요삼 선수가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그는 1월3일 새벽 1시 인공호흡기를 떼내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 이전에 장기기증 수술을 통해 폐와 심장, 신

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신장기증 대기자가 2000년 3천120명이었다. 이 해마다 급증해 2007년 9월 6천72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신부전환자 증가 속도에 비해 신장 이식은 2006년에 불과 935건 시행됐다.

우리나라 장기기증자 수는 100만명당 3.1명 수준으로 스페인 30명, 미국 25명 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 제도를 시행중에 있지만 4개월 동안 534건에 불과하다. 이는 20대이상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21만여명의 0.3% 수준이다.

이같이 운전면허증 장기기증 표시 제도가 걸고 있는 것은 사전등록을 해야

## 생명나눔운동은 최고의 기부다

장, 책장, 악막 등 모든 장기를 맡기않 환자 6명에게 아낌없이 나눠줬다. 뿌리깊은 유교사상으로 장기기증이 여전히 어려운 현실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만성신부전증, 간암, 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생명나눔 운동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 따르면 지난해 뇌사자 장기기증은 148명으로 신장 281건, 간 127건, 심장 5건, 췌장 18건, 폐 17건, 췌도 1건, 악막 18건을 이식해 모두 677명에게 새 생명을 안겨줬다. 또 1천609명은 건강한 상태에서 장기를 기증해 신장 694건, 간장 634건, 골수 285건을 나눠줬다. 지난 196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신장이식 수술이 이뤄진 이후 현재까지 약 2만여건의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추산된다.

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1986년 2천 534명에 불과했던 장기 신부전 환자는 지난 2000년 2만8천046명, 2006년 4만6천730명으로 21년 동안 17.4배 증가

하고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때문이다.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장기기증 표시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장기기증 희망을 신청했다라도 2006년 이전 등록했다면 재등록을 해야 한다. 게다가 재발급에 드는 수수료 6천원을 본인 부담하게 하는 것도 기피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장기기증 의사표시제도를 운영할 일이지만 정부가 사전등록을 지나치게 강조해 일반인들의 동참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운전면허증 신청양식서에 장기기증 의사를 묻는 체크란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새해 벽두 우리 곁을 떠난 최요삼의 숭고한 나눔정신이 불꽃 피어나듯 번져가길 기대한다.

<현철·장기기증 홍보대사>

## 오토바이도 무사고 운행면 보험료 할인해 줘야

회사까지 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이다. 지난 3년간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면서 사고 한번 나지 않았고 딱히 한 번 때 안 적도 없다. 당연히 무사고이고, 과속도 하지 않았다.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보험료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는 것이다. 오토바이 보험에는 일반 자동차 보험처럼 할인율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료 1년 약 15만원 정도 내는데 필자처럼 사고가 없다면 할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오토바이로 생계를 꾸리는 운전자, 무사고 출퇴근용 운전자 등은 장기간 무사고 운행 때 보험할인 혜택을 주는 게 옳지 않을까.

▲정영환·광주시 동구 총장로2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백강화



얼마 전에 가족들과 섬진강에 다녀왔다. 섬진강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다. 그늘 보기도 해도 좋은 채 천문대까지 들어서서 이제 아이들에게 새로운 호기심거리를, 그리고 야간에 가 볼 동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한다. 개발을 하더라도 자연과 어울리게 할 수 있으면 그 자연 속에서 테마를 찾는 것 말이다.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은 이제 분명 후진국 형태이다.

지리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아침 섬진강을 보기 위해 강가로 나왔다. 찬란한 금빛 모래가 빛나고 있는 섬

하자 우리 모두 환성을 질렀다. 비록 아무 소출은 없었지만 그날 오전 내내 보낸 그 섬진강의 시간은 쉬이 잊혀지지 않는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하천 중에 가장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수변 역시 거의 자연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은어를 비롯한 황어, 연어같은 회유성 어류들까지 먼 바다를 돌고 돌아 오는 고향일 정도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나는 토목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물론 토목공사를 벌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양은 되리라 예상한다. 그리고 또 운하

## 섬진강과 대운하 사업

진강가에 아이들이 풀을 놓았다니 초등 2학년 아들이 "엄마, 이것 봐!"하고 커다란 까만 조개를 주워왔다. '아니 민물에도 조개가 사나?'하고 아들이 주운 곳으로 가 보았더니 그야말로 조개 천지였다. 먹는지 못 먹는지는 둘째 치고 아무튼 우리 가족은 조개잡이에 푹 빠졌다.

그렇게 봉투 한 가득 채워놓았는데 아빠가 다시 풀어주라고 제안해서 아쉬워도 놓아 주었다니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잡는 재미만으로도 그 보상은 충분하고 남았다.

또 물웅덩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곱사등이 새우들이 많이 보였다. 아 이들이 잡아달라고 조르기에 손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새우가 툭툭 튀는 바람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아빠가 기지를 발휘, 가만히 손으로 물가로 몰아 마침내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

가 생기면 새로운 볼거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 청계천에 가 보았다. 아마 청계천은 바로 대 운하의 축소판이리라 생각한다. 내가 본 청계천은 시냇 분수대 같은 그저 큰 수조정도만 여겨졌다. 도시민들의 잠깐 휴식처로는 제격이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기에는 너무나 삭막한 공간이었다.

개발논리에 따른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 있어도, 우리 가족들이 잠깐 체험했던 그 자연의 감동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면 나는 그 사업에 반대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도대체 인간만 살아서 무얼 어찌했던 말인가? 난 비록 조금은 가난할지언정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우리 후손들 역시 그러길 간절히 바란다.

(주부·2005년 12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 '생명 직결' 암 수술 2~3개월 기다려서야

몇일전 가까운 친척 어른께서 위암 진단을 받았다.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해서 서울 유명 대학병원에 알아봤더니 2~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기다리면 병은 계속 악화될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수술이 급한 환자나 그 가족들이 병원에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 줄을 대서 하루라도 빨리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이유를 새삼 깨달았다. 병원에서 암 수술처럼 생명과 직결된 수

술을 2~3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의사 부족 때문이다.

의사 지망생들이 돈 안되는 마취·외과분야 등을 기피하다 보니 전공의가 부족해 수술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수술 전문 외과의사가 부족해 제한된 인원이 장시간 수술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다.

돈 되는 성형외과·피부과 등에만 몰리는 의료계 현실을 타개할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조한나·광주시 북구 문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孝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光주시가11(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시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